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9.(화) 12:00
(지면) 2026. 6. 10.(수) 조간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의 힘 행안부, 지역별 '온마을 돌봄밥상' 가동

- 관악구·정선군 등 전국 17개 지방정부 최종 선정
- 먹거리 나눔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 및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
- 주민자치회 주축의 실질적 돌봄 실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한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먹거리 나눔과 돌봄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안정망을 촘촘히 하고,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공동체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전국 17개 지방정부 선정, 주민 주도 공유주방으로 촘촘한 돌봄망 구축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마을 단위 공유주방 조성 과 주민자치회 중심의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를 진행했다.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지방정부는 ▲서울 관악구 ▲부산 동구 ▲인천 용진군 ▲광주 동구 ▲경기 가평군 ▲강원 정선군 ▲충북 괴산군 ▲충남 논산시 ▲충남 당진시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 ▲전남 보성군 ▲전남 해남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합천군 총 17곳이다.

>> 최대 8천만 원 특별교부세 지원, 3년간 지역 거점 돌봄 모형 운영

선정된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주방을 기반으로 반찬 나눔, 건강·영양 상담, 심리 상담 연계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정부에 최대 8천만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지역 거점 공간 조성을 돕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이어지며, 주민자치회 등 마을공동체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고 지방정부는 사업 총괄과 행정적 지원을 맡는 협력 체계로 운영한다.

구분군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이 단순한 먹거리 지원을 넘어 주민 간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지역 돌봄의 성공 모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스마트안전기획팀	책임자	과 장	박남기 (044-205-6411)
		담당자	사무관	이수민 (044-205-6413)



< 12개 시도 17개 시군구 >

연번	시도	시군구	사업명
1	서울	관악구	난곡 온(溫)나눔 돌봄사업
2	부산	동구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구 식탁
3	인천	옹진군	옹진형 온마을 돌봄밥상
4	광주	동구	수요밥상
5	경기	가평군	가평형 온(溫)마을 돌봄밥상
6	강원	정선군	광산에서 다시, 온기밥상
7	충북	괴산군	따숨찬 반찬 나눔
8	충남	논산시	고립을 녹이고 관계를 잇는 달콤한 돌봄 한상
9	충남	당진시	면천 온마을 돌봄밥상 공유주방 기능보강 사업
10	충남	서천군	화양 온마을 생명돌봄 회복밥상 사업
11	전북	진안군	진안고원 365일 흰구름 온기밥상
12	전남	곡성군	한끼로 연결되는 죽곡형 온(溫)마을 돌봄 플랫폼 구축사업
13	전남	보성군	별교 온마을 공유주방: 희망찬(饑) 허브
14	전남	해남군	해남형 온마을 돌봄밥상 조성사업, 아침을 여는 아이, 한 끼로 이어지는 돌봄
15	경북	예천군	사랑의 반찬나눔 공유주방 운영
16	경남	하동군	하동군 따뜻한 한끼, 함께 차리는 이웃돌봄
17	경남	합천군	한 끼 있다